19.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정 2003. 7. 7

개정 2005. 7. 6

개정 2006. 6.28

개정 2008.12.22

개정 2010. 3.31

개정 2011.10.20

개정 2013. 1.23

개정 2013. 9.30

개정 2016. 7.14

개정 2016.12.27.

개정 2020, 5.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사업"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단이 지원사업 수행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
-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전담하는 재단을 말한다.
- 3. "주관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 정 2013.9.30>
- 4. "참여사업자"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주관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30>
- 5. "사업비"라 함은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6. "지원금"이라 함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3>
- 7. "사업자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주관사업자 및 참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9.30〉
- 8. "기술료"라 함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로부터 지원총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2, 2013.9.30>
- 9. "환수금"이라 함은 주관사업자가 제재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을 관리기관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9.30>

- 10. <삭제 2013.1.23>
- 11. <삭제 2013.1.23>
- 12. <삭제 2013.1.23>
- 13. <삭제 2013.1.23>
- 14. "채권"이라 함은 사업지원에 따른 계약상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3.1.23>
- 15. "채권추심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채권 자의 위임 하에 채무자의 신용조사, 채권추심업무, 기업신용평가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8〉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 정 2013.1.23>

제4조(지원사업의 구분) 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도내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지원사업
- 2. 도내 문화콘텐츠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 3. 도내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 4. 도내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사업
- 5. <삭제 2013.1.23>
- 6. 도내 콘텐츠 창작·개발 지원사업 <신설 2008.12.22>
- ②관리기관의 장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제 1항 각 호의 사업에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①지원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화콘텐츠관련 기술 및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 2. 영리법인
  - 3. 교육기관
  - 4. 기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5. 개인사업자 및 개인
  -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 4조 1항의 지원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 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 제6조(심의위원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의 평가·선정
  - 2.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 3. 기타 사업의 공정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심의위원회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와 지원사업관련 관리기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계약 및 정산)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계약과 정산에 관한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공고) ①관리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지원사업계획에는 지원사업의 지원분야,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 제10조(지원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로 그 성격에 따라 선정평가기준이나 지원결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수행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수행
  -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사업 신청시 회수금 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는 회수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해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원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 2. 지원사업 수행능력(책임자의 능력 및 사업자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개정 2013.9.30>
  - 3.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사업자 등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개정 2013.9.30>
  - 4. 지원사업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 5.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 6.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 7.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칙에 의한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위배되는 지원신청서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④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1항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사업기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조정하여 수행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②관리기관은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3.31, 2013.9.30>
    - 1. 사업공고 상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 2. 제출요구서류의 적정성 부합 여부 <개정 2010.3.31>
    - 3. 기타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한 사항 <개정 2010.3.31>
-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 12조의 규 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관리기관은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대상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 제14조(지원대상의 확정)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신청과제 수가 예정한 지원과제 수 또는 지원예산 범위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제15조(지원대상의 확정 통보 등) 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행계획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 제16조(협약체결)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협약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②관리기관이 주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2, 2013.9.30>
  - ③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시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현물 및 현금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9.30>
  - ④주관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2013.9.30>
  - ⑤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협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주관사업자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②주관사업자는 협약 또는 수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 서 및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③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협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③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 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9.30>
- 제19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위탁사업 비로 구성한다. 다만,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정부 예산 편성기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관리기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협약 내용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3.9.30>
  -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는 당해 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개정 2020.5.25.>
  - 1. 기자재 및 시설 : 개발에 사용되는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비 <개정 2010.3.31>
  - 2. 재료 등 : 개발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신설 2008.12.22>
  - 3. 인건비 : 참여인력에게 수행기관이 부담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 2010.3.31>
  - ④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1.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2.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신설 2008.12.22>
  - ⑤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심의는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자료를 검수한

후 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3.1.23.>

- 제2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사업의 경우 주관사업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는 카드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출은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9.30> ②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①관리기관은 제 26조 1항에 의거 주관사업자가 제출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3.9.30>

- ②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시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에 세부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사업자 및 참여사업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제23조(사업비 잔액의 반납) ①주관사업자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 금액 포함) 발생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 좌에 입금해야 하고,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제 26조 제1항의 결과보고서 제출 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②총사업비 증액시 주관사업자는 증액분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감액시 지원 금의 비율을 재산정하여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0.3.31, 2013.9.30>
-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 확정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24조(위탁사업 등) 주관사업자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 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사업(이하 "위탁과제"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또는 수 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30>

- 제25조(지원사업 수행관리 등) ①주관사업자의 장 및 책임자는 협약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②주관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개정 2013.9.30>
  - ③주관사업자의 장은 책임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3.9.30>
  - ④관리기관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목표, 내용 등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제2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사업자는 과제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②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지원사업 후 회수관련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제27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기준을 정하여 결과 평가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
- 제28조(지원사업결과의 평가) ①관리기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별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9조(지원사업 종료)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별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해 상호 협의 하에 지원사업의 종료와 평가를 실시한다.
  - ②관리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의 결과보고가 최근 2개년간 동일한 경우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한다.
- 제30조(개발 결과의 발표)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 제31조(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귀속은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2조(개발성과의 활용) 관리기관은 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별로 주관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제33조(기술료의 징수) ①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주관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은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1. 대기업(연매출 800억 초과) : 지원금의 20% 이상 30% 미만
  - 2. 중소기업(연매출 50억 이상 800억 이하) : 지원금의 5% 이상 20% 이내
  - 3. 소기업(연매출 5억 이상 50억 미만) : 지원금의 3% 이상 10% 이내
  - 4. 영세기업 (연매출 5억 미만) : 기술료면제 <개정 2016.12.27>
  - ②기술료는 지원사업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1회차 납부일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개정 2013.9.30>
  - ③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면제한다.
  - 1. 주관사업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 부설기관 인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 2. 주관사업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 3. 주관사업자가 국공립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개정 2010.3.31, 2013.9.30>
  - 4. 기타 사업 특성상 혹은 재난이나 그 밖에 재난에 준하는 경제적 피해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8.12.22.> <개정 2020.5.25.>
- 제33조의 1(기술료의 사용 등)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시 징수될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장의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 양성
  - 2.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
  - 3.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경기도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의 관리 <신설 2008.12.22.>
- 제33조의 2(기술료의 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기술료 징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지원사업 제재 및 기술료 미납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 제34조(보증보험증권 징구) ①관리기관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집행 및 미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차수별 지급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주관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료 납부대상인 경우 기술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징구한다. <개정 2013.9.30>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차수의 지원금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원금에 대해 주관사업자로부터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9.30>
  - ③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에서 부담한다. 단, 기술 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 제35조(채권발생 기준) 채권의 발생기준은 각각의 계약에 따라 정의된 채권발생 시기에 따라 채권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본조신설 2006.6.28〉
- 제36조(채권처리 수순) 채권처리 수순은 통상적으로 1차 협의, 2차 내용증명 발송, 3차 채 권추심기관 위탁, 4차 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순으로 한다. 〈본조신설2006.6.28.〉
- 제37조(채권처리 수순 기간) 채권처리 수순에 따른 단계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 와 같이 한다.
  - 1. 1차(협의)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1~3개월
  - 2. 2차(내용증명) : 채권사유 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
  - 3. 3차(채권추심기관 위탁) :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한다.
  - 4. 4차(법적대응 및 결손처리) : 채권추심기관의 업무평가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6.6.28〉

- 제38조(채권추심기관 선정) ①재단은 공고를 통하여 채권추심기관을 선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기관은 상세 업무내용과 채권회수 성공 수임요율을 기 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최저 수임료를 신청한 업체를 선정한다.
  - ③채권추심기관 선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선정업체는 계약만료일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6.6.28〉
- 제39조(채권 손실처리 기준) 재단이 선정한 채권추심 기관의 업무평가 중 다음 각호의 업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의 법적대응, 채무삭감, 결손처리 등을 할 수 있다.
  - 1. 채권 발생일이 2년 경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업체
  - 2. 업체의 청산·파산·부도·폐업
  - 3. 국세청에 의한 강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업체
  - 4. 삭제〈2016.12.27.〉
  - 제40조(보안유지) 관리기관 및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8, 2013.9.30〉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7. 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2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3.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1.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9.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7.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5.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개정 2010.3.31, 2013.9.30>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지원금을 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술료 미납액의 채권 처리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53.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정 2021. 2. 1. >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2021. 2. 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 제6조(심의위원회), 제12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 제13조(지원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에 의거 지원과제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심의위원회"라 함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시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전문가"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산·학·연·관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 3. "서면평가"라 함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4. "발표평가"라 함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5.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사업자·참여사업자를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6. "평가·심의의원 관리부서"라 함은 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선정,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팀, 센터)를 말한다.

##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단 계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각 평가의 내용

- 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원사업 및 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평가·심의위원 관리부서는 해당 심의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한다.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해관계자 해당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 2. 심의위원은 평가·심의위원 관리부서에서 추출하는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필요시, 예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 3. 사업부서는 제2호 인원을 추출 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평가·심의위원 관리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해당사업 소관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다.
- ⑤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평가, 결과평가 심의위원회는 선정평가 참여 심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위촉된 심의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문가 자격) ①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자의 자격은 '평가·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따른다.

②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및 기업의 사업 책임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평가) ① 심의위원회의 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계산하되 장르·사업의 특성 및 심의위원 구성인원에 따라 별도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의 참여제한, 제척사유) ① 관리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 평가에서 제외한다.

- 1. 평가 대상과제의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소속된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2. 평가 대상과제의 과제·사업책임자와 최종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 관계인 자
- 3.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4.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 5. 허위경력·불공정평가·비위사실이 확인된 자
- 6.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② 심의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당해년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평가한 동일 지원과제에 사업수행 형태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의위원의 해촉) 평가·심의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 3 장 평가

제8조(평가의 구분)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로 분류한다.

제9조(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은 신규 지원과제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 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 제외한다.

-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여부
- 2. 참여자격여부
- 3.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지원과제 선정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방법은 각 평가단계별(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등)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5점 내외로 가산할 수 있다.
- 1.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주관기관·참여기관 선정기준) ① 주관기관·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사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금의 규모 및 집행 계획, 수행배제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동일 주관기관·참여기관에 대한 지원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중간평가) 관리기관은 지원과제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결과평가) 관리기관은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① 관리기관은 개발 결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량" 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2.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관리기관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주관 기관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 2. 제재조치 여부 및 지원금 환수여부
- 3.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선정평가결과, 평가 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기관은 지원 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 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단계평가) ① 관리기관은 총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당해 단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서 사업수행결과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당 다년도사업의 계속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단계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일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 점검실적을 단계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17조(비밀의 유지) ①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취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평가수당 지급) 관리기관은 심의위원에게 '실비보상 지급 규칙'에 따라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관리기관은 심의 과정의 주요 발언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위원의 주요 발언, 의결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참석한 심의위원 전원의 확인과 서명을 거쳐 확정한다.
- ③ 심의와 관련한 별도의 발언, 협의 과정이 없는 단순 심의, 계량적 평가 등의 경우는 평가결과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발언 및 협의가 없는 단순 심의, 계량적 평가 등의 경우와 위원회가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원사업 선정심의심 의 평 가 표

접수번호	2020-「 」지원사업-001		
작 품 명			
심의영역	평가항목	배점	점수
	합 계	100	0
심의의견			

		_	_
20	녀	웍	<u>o</u>

심의위원 : (인)

## 

본인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0 「 」지원사업 선정심의'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본 사업의 심의기준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 O 심의내용과 심의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O 최종결과 발표 전까지 심의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 O 심의업무에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 회피를 신청한다.
    - 평가 대상과제의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평가 대상과제의 과제·사업책임자와 최종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경우
    -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O 기타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심의위원 : (인)

심의위원 : (인) 심의위원 : (인)

심의위원 : (인)

##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별표 3] 청렴이행 서약서

## 심의위원회 청렴이행 서약서

위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지방보조금 등) 의 사용 등 위원회 사무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하겠으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 렴

경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음으로써 도민에 게 신뢰받는 청렴경기를 만든다.
-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 . .

위 서약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별표 4] 소득 지급관련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관련 민감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 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 사항에 근거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무처리(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민감정보는 세무처리와 대금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오니, 제공에 동의 바랍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처리가 불가능하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 수집담당자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팀 (서명)

※ 최대한 정자체로 기재바랍니다.

### ≪ 민감정보 제공 사항 ≫

1,500	
기타소득	/ 사업소득
9	<b>7</b> 0
/	/
(2)	
	/

민감정보 제공 동의일 : 년 월 일

민감정보 제공 동의자 : (서명)

\* 진흥원 규정에 따라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성명과 예금주 불일치, 타인명의 또는 회사명의의 계좌 등

##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일시 / 장소	20 00:00 ~ 00:00 / 000회의실
심의안건	「 」지원사업 선정 심의
참석 심의위원	총 0명
심의내용	「 」지원사업 신청기업 00개사 평가
주요 발언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서명)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 (서명)